

# 2019년 독일 장벽붕괴 30년의 변화와 전망

한승완 책임연구원  
hanphil@inss.re.kr

I. 문제제기

II. 장벽붕괴 30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발전과 문제점

III. 독일 정부의 대응방향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국문 초록

---

현재 독일은 동서독 장벽이 붕괴된 30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열광보다는 냉정한 평가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제적 평준화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양독 지역 간 정서적 차이, 상호 간의 편견, 사회심리적 차별의식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실태를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의 문제점, 엘리트 충원의 편중, 동독향수병의 부활, 구동독 지역 특유의 정치지형의 형성 등을 통해 살펴본다.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방향을 서술한 후 구동독 주민의 열등의식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핵심어: 독일통일, 사회통합, 극단주의, 정치지형의 분리

---

## I. 문제제기

- 30년 전 1989년 11월 9일 당시 동독 공산당 정부의 베를린 장벽 개방은 동서독의 시민은 물론 전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냉전체제의 종식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 독일은 2019년 9월 9일 독일 재야운동단체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토론회로부터 시작하여 2020년 10월 3일 독일통일 30주년 기념식에 이르기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양한 일련의 통일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음
  - 1989년 여름에서 1990년 가을에 이르는 1년여의 기간은 헝가리와 체코를 통한 동독 주민의 대거 탈주, 동독내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의 확산, 베를린 장벽의 개방, 동독의 자유총선, ‘화폐경제·사회통합’의 실시, 동독 5개 주의 서독 연방에로의 가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통일조약’의 체결과 비준, ‘2+4협정’의 체결,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였음
  - 이 기간 동안 초기 동독체제의 개혁을 요구했던 ‘평화혁명’이 체제를 달리하는 2개의 독일 국가의 국가통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짐
- 독일은 통일후 지난 30년 동안 약 80조 원에 달하는 ‘통일기금’(1990~1994), 매년 206억 마르크를 구동독 지역에 투입하는 ‘제1차 통일연대세’(1995~2004)와 총 1,560억 유로에 달하는 ‘제2차 통일연대세’(2004~현재)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구동독지역의 ‘재건’(Aufbau Ost)을 추진해왔음
  - 이는 구동독 지역의 인프라구조 건설, 생산시설과 근로환경의 개선 등과 함께 구동독 주민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을 위해 사용함
- 통일 직후 낙후한 동독 경제로 인해 기업의 청산, 대량실업의 발생, 고급 노동력의 서독 이주 등의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나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은 점차 구서독 지역에 수렴되어 왔음

-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GDP에서 구서독 지역의 74.4%에 도달하고 가계소득에 있어서도 구서독 지역의 약 85%에 달하는 등 경제력에서 양독 지역 사이에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짐
- 이러한 경제적 평준화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구동독과 구서독 간의 정서적 차이, 상호 간의 편견, 사회심리적 차별의식 등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어 통일 직후의 1990년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제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발전상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과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구동서독 지역주민 간의 사회심리적 차이와 정치지형의 차이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함

## II. 장벽붕괴 30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발전과 문제점

### 1.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상<sup>1)</sup>

#### 가. 양독 지역 간 경제력의 평준화

- 2018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2,108 유로로 구서독 지역 42,797 유로의 74.7%에 도달함
- 이는 통일되던 해 동독의 경제력이 서독의 4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0여년 사이 괄목할 만한 구동독 경제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구동독 지역 경제력은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견줄 만한 수준임

1) 이하의 구동독 지역 경제지표는 다른 전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9)을 참조.

- 그동안 양독 지역 간의 경제력의 수렴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왔는바, 1단계는 1996년까지 구동독 경제력의 62%까지 급속히 성장했으나 2단계인 1997~2000년 사이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 양독 간의 격차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01년 이후 비록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sup>2)</sup>
- 이러한 구동독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는 미래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중소기업의 정착에서 찾을 수 있음

## 나. 노동시장의 개선

- 노동시장의 개선도 최근 20년 사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는바, 양독 지역 간 실업률의 차이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구동독 지역의 고용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실업률이 구서독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한 결과로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의 기간 동안 양독 지역 간의 실업률 격차가 10%에 육박했던 사정과 대비됨
  - 독일 통일 초기 구동독 지역 경제의 붕괴로 급속히 악화된 고용사정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개선되어왔음<sup>3)</sup>
- 2014년 이후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10% 이하로 내려가면서 양독 지역 간 차이는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구서독의 4.8%에 대해 구동독이 6.9%로 두 지역 간 차이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고상두,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2015 겨울), p. 88 이하 참조.

3) 고명덕,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2015 겨울), p. 108 이하 참조.

[표 1] 구동서독 지역의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년도	구서독 지역	구동독 지역	양 지역 간 차이
1994	8.1	14.8	6.7
1995	8.1	13.9	5.8
1996	8.9	15.5	6.6
1997	9.6	17.7	8.1
1998	9.2	17.8	8.6
1999	8.6	17.3	8.7
2000	7.6	17.1	9.5
2001	7.2	17.3	10.1
2002	7.6	17.7	10.1
2003	8.4	18.5	10.1
2004	8.5	18.4	9.9
2005	9.9	18.7	8.8
2006	9.1	17.3	8.2
2007	7.4	15.0	7.6
2008	6.4	13.1	6.7
2009	6.9	13.0	6.1
2010	6.6	12.0	5.4
2011	6.0	11.3	5.3
2012	5.9	10.7	4.8
2013	6.0	10.3	4.3
2014	5.9	9.8	3.9
2015	5.7	9.2	3.5
2016	5.6	8.5	2.9
2017	5.3	7.6	2.3
2018	4.8	6.9	2.1

출처: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9). p.116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 소득수준의 향상

- 2018년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구동독 지역이 2,790 유로로 구서독 지역의 3,340 유로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 지역 간 임금격차에서는 격차축소의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바, 2005년 이후 8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함
  - 다만 2017년 81%에서 2018년 84%로의 변화는 최근 추이로 보면 예외적인 경우로 평가됨
- 청년층의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연금생활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구동독 지역의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는 연금이라 할 수 있음
- 독일 정부는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구동서독 지역 간 연금균등화를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2019년 7월 1일 현재 연금산정기준인 '실질연금가치'에서 구동독은 구서독의 96.5%에 접근함

### 라. 인구 이동의 역전

- 통일 이후 1990년대 구동독 지역의 고숙련 청년층이 구서독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경제력의 중심으로 부상한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이주하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구동독 지역 인구는 고령화되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함
  - 1991~2017년의 기간 동안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의 이주가 370만 명, 구서독에서 구동독으로의 이주가 250만 명으로 구동독 지역은 120만 명의 인구를 상실함<sup>4)</sup>
- 2000년대 들어 서독으로의 이주는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2017년에는 최초로 구동독으로 이주가 구서독으로의 이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인구 이동의 역전은 2018년에도 지속됨
- 이러한 인구 이동의 역전은 구동독 지역의 첨단기술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4) "Rüber und retour", *Der Spiegel*, Nr. 32 (2019), p. 56.

## 2. 구동독 지역 '재건'의 문제점

### 가. 대기업의 부재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구서독 지역의 경제력에 수렴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격차라 할 수 있음
- 생산성 기준으로 보면 구동독 농촌지역의 생산성은 구서독의 최저 생산성 지역보다 낮으며, 구동독의 경제중심 지역조차 구서독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수준에 불과함
- 이러한 차이는 구동독 지역경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함<sup>5)</sup>
- DAX지수에 속하는 독일 30대 대기업 중 구동독 지역 기업은 없으며 구동독 지역에 독일내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대기업도 없음
- 500대 기업으로 보면 이들 기업 중 464개가 구서독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면 구동독 지역에는 36개 기업에 불과함
- 이로써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 지역에 대한 부품공급지로 전락했으며 자립적 경제기반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나. 엘리트 층원의 서독 편중 지속

- 통일 직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체제전환을 이끌 엘리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독으로부터 엘리트 유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군, 경찰, 사법, 행정, 정당, 각급 교육·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경제계, 문화계, 신문·방송 등 언론계 등 전분야 걸쳐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짐

5)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앞의 책, p. 21 참조.



- 통일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중요 분야에서 구동독 지역 출신 간 엘리트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구동독 주민의 불만과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조사에 따르면 DAX기업 임원 196명 중 5명만이 구동독 지역 출신이며 연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120명 중 3명만이 구동독 지역 출신으로 나타남

#### 다. 구동독 주민의 '이등국민' 의식과 통일에 대한 불만

- 독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구동독 주민의 57%가 자신들을 여전히 '이등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어 양독 국민 간 사회통합의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보여주고 있음
- “통일은 성공적이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구동독 주민의 약 38%만이 동의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구동독 주민 중 40세 이하에서는 약 20%만이 동의한다고 대답함
- 특히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우려되는바, 동독 지역 주민의 약 절반 정도가 독일 민주주의 운용방식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하고 있음<sup>6)</sup>
  - 이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운용방식이 동독지역 주민의 고통과 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라. '동독향수병'(Ostalgie)의 부활

- '동독향수병'(Ostalgie)은 구동독 지역(Ost)과 향수병(Nostalgie)의 합성어로서 구동독 주민이 과거 동독체제와 생활상을 그리워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의식 상태를 지칭함
-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의뢰를 받아 '알렌스바흐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동독향수병'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음

6) 위의 책, p. 13 참조.

- “현재보다 과거 동독에서 서로 더 결속적이고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설문에 대해 독일 전체 주민의 44%가 긍정하고 있는데 비해 구동독 지역 주민의 77%가 긍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전의 결과로 후퇴한 수치임
- “동독에서는 모두 평등했고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었다”라는 설문에 대해 과거 동독체제를 경험한 구동독 지역 주민의 38%가 긍정하고 있음
- 중장년 세대의 구동독에 대한 향수와 함께 청년층 세대의 구동독 체제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도 주목되는 현상임
  - “동독의 사정은 그럭저럭 봐 줄만 했다”라는 설문에 대해 구동독 지역 30세 이하의 청년층의 12%가 각각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76%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결정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음<sup>7)</sup>
- 급기야 구동독 지역의 일부 주정부는 과거 동독의 독재체제를 ‘불법국가’(Unrechtsstaat)로 칭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하는바, 이러한 명칭이 구동독 주민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 때문임

#### 마. 반외국인·반난민 정서의 확산

- 구동독 지역 주민의 피차별 의식은 제도권 엘리트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 더불어 외국인, 난민, 유대인 등 ‘사회적 타자’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구서독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외국인 거주 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혐오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
  - 동독 출신의 ‘민족사회주의자 지하당’(NSU) 조직원 3명은 2000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독일 전국을 돌며 주로 터키계 이민자 등을 살해함
  - 난민수용시설 방화 등 난민대상 증오범죄가 구서독 지역의 10배가 발생함

7) “Das Verblissen der Erinnerung an die Diktatur”.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9년 10월 16일.

## 바. 구동독 특유의 정치지형의 형성

- 동독의 서독 연방제 가입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에서 이후 정치통합은 서독의 정당과 체도가 구동독 지역으로 이식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기민·기사련’(CDU/CSU)의 보수와 ‘사민당’(SPD)의 진보 양대 국민정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자민당’(FDP)과 환경운동에서 출발한 ‘녹색당’(Grüne)이 주니어 파트너로 연정에 참여하는 ‘2.5당 체제’가 서독의 전통적인 정당체제임
- 구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불만, ‘동독향수병’의 확산 등은 구동독 지역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통일 이후 25년 간 과거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Die Linke)이 구동독 지역에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함<sup>8)</sup>
- 2010년대 중반부터 구동독 지역 주민의 선거경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대변자로서 ‘좌파당’ 지지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대안당’ 지지로 전환되고 있는바,<sup>9)</sup> 지난 2017년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구서독 지역에서는 ‘기민·기사련’(34.1%), ‘사민당’(21.9%), ‘자민당’(11.4%) 대안당’(10.7%), 좌파당’(7.4%), ‘녹색당’(9.8%) 순서로 지지율을 보임
-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기민·기사련’(27.6%), ‘대안당’(21.9%), ‘좌파당’(17.8%), ‘사민당’(13.9%), ‘자민당’(7.5%), ‘녹색당’(5.0%) 순서의 지지율을 보임
  - 구동독 지역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대안당’이 제2당, 구동독 공산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좌파당’이 제3당을 지위를 차지하고 전통적 국민정당인 ‘사민당’은 제4당의 위치로 전략함
  - 이로써 독일의 전통적인 정당체제인 ‘2.5당 체제’가 구동독 지역에서는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념적으로 좌우의 양 극단에서 있는 정당이 제2, 제3정당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은 물론 독일 전국적으로도 정치불안정이 심화됨

8) 김면희,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 후발주자 분단 한반도의 선택”, 『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1호 (2019 여름), p. 26 이하 참조.

9) Ilko-Sascha Kowalczyk, “Das Ende der DDR 1989/90. Von der Revolution über den Mauerfall zur Ein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9. Jahrgang, 35-37 (2019), p. 11 참조.

### III. 독일 정부의 대응방향

#### 1. 독일 정부의 대응 정책<sup>10)</sup>

##### 가. 구동독 지역의 산업·혁신경쟁력 강화

- 독일 전체의 산업전략인 ‘국가산업전략 2030’의 연장선 상에서 구동독 지역이 산업·혁신경쟁력을 갖는 분야를 중점 육성, 지원함
  - 이에 해당되는 분야는 마이크로전자공학, 경량소재, 전기자동차, 배터리생산, 에너지·클린테크 부문 등임
- 구동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숙련인력 보호, 혁신과 디지털화 지원 등의 조치를 추진함
  - 특히 구동독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 기업’과 ‘혁신과 구조변화’ 라는 2개 정책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해 구동독 지역의 혁신력 강화를 추진함

##### 나. 새로운 ‘생태적 현대화’ 추진

- 독일은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는 구동독의 석탄채굴 지역에 심각한 구조변화를 이미 가져오고 있음
- 연방정부는 이를 오히려 동 지역의 ‘생태적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경제 구조의 현대화, 미래산업 분야의 구축, 강력한 인프라와 미래형 일자리의 창출 등을 추진하는 ‘구조강화법’을 결의함

10) 이하의 독일 연방정부의 대응정책은 “30 Jahre nach der Friedlichen Revolution: 12 Handlungsfelder zur Stärkung der ostdeutschen Länder und des Zusammenwachsens zwischen Ost und West”, (Berlin: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2019)를 참조.

#### 다. 양독 지역 간 동등한 생활환경의 창출

- 독일 정부는 사회적 유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 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동등한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함
- 이를 위해 ‘동등한 생활환경 위원회’를 설립,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10일 일련의 조치를 결의함
  - 전국 무선통신과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공공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 지역중심의 활성화, 지역 예술과 문화의 증진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한 농촌지역의 강화, 농촌지역과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강화

#### 라. 과거사 청산과 양독 간 상호이해 증진의 심화

- ‘평화혁명과 독일통일 30년 위원회’를 설립, 장벽붕괴와 독일통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함
  - 1989년 ‘평화혁명’에서부터 1990년 독일통일의 1년여의 기간에 주요한 기념일을 기회로 다양한 토론회, 시민대화, 전시회,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주요 기념일: △독일 재야운동단체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창립일(9월 9일), △프라하의 동독 대사관 탈주민의 서독 입국일(9월 30일), △라이프치히 대규모 월요시위일(10월 9일), △베를린 장벽개방일(11월 9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일(3월 18일), △화폐·경제·사회통합일(7월 1일), △‘2+4협정’ 체결일(9월 12일), △독일통일일(10월 3일)
- 과거사를 청산하고 희생자를 보상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동 제도장치를 개선하고, 특히 통일 이후 ‘재건’과정에서 구동독 지역 주민의 노고를 재평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마. 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강화와 지역정체성 형성의 지원

-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 이해를 강화시키고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민주주의로 살기!’(Demokratie leben!), ‘참여를 통한 유대’(Zusammenhalt durch Teilhabe), ‘농촌발전’(Ländliche Entwicklung)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함

- 주로 농촌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과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독일재단’을 구동독의 농촌지역에 신설함으로써 지역 주민 참여를 촉진함
- 동독지역에 고유한 온·오프라인 박물관을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를 회상하는 한편 자신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지원함
- 이러한 건강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은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을 포용하는 독일인 전체의 국민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바. 연방정부 기관의 구동독 지역으로의 이전**

- 경제구조가 취약하거나 구조전환 중에 있는 구동독지역의 중소도시에 연방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구동서독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함
- ‘연방간선도로청’, ‘독일 철도교통연구 센터’, ‘사이버보안과 핵심기술 분야 파괴적 혁신기구’ 등은 이미 동독 이전이 결정되었음
- 라이프치히에 연방재판소의 형사부의 추가 설치, 동부 작센에 연방경찰의 교육기관 설립 등을 계획 중임

##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 1. 향후 전망

#### 가. 장기적 과제로서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평준화

-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그동안 많이 접근했으나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완전히 평준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은 독일 정부의 집중적 투자 의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정부는 2021년부터 ‘통일연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을 크게 높임으로써 국민의 90%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6.5% 국민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새로운 법안을 최근 결의했는바,<sup>11)</sup> 앞으로 구동독 지역만을 위한 재정수단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석탄과 철강산업 중심이었던 구서독의 루르지역의 경우 급속히 낙후하고 있는바, 동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지역이 구동독 지역보다 연방 차원의 지원이 더 시급한 지역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음
- 결국 향후 독일 연방정부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전국에 걸쳐 있는 낙후 지역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양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평준화는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11) 2019년 8월 21일자 독일 재무부 보도자료(<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9/08/2019-08-21-PM-SoliZuschlag.html>, 검색일 2019.10.20)

## 나. 구동독 주민의 사회심리적 열등의식의 장기간 지속

- 정부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시민계층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민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으나, 그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구동독 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의 소멸은 경제력과 생활수준의 평준화보다 더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 극단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는 경향 등은 독일사회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극우나 극좌 성향의 극단주의 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 확대하여 독일의 민주적 정치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배경이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음

## 2. 시사점

### 가. 통일 한국에서 북한 지역 특유의 정치지형의 형성 가능성

- 우리의 경우 통일의 방식과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겠지만 북한지역에서 통일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불만과 사회심리적 ‘열등의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불만과 ‘열등의식’이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 분출되고 소화되지 않는다면 북한 지역에서 한국의 나머지 지역과는 이질적인 정치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독에서 확립된 정당체제가 동독으로 이식된 결과 동독지역 주민의 이익과 정서를 대변하지 못하였음
- 북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좌우의 극단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나. 시민사회적 대안 마련 모색

- 무엇보다 한반도 전역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엘리트 층원에서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춰 통일 이후의 발전을 구상해야겠지만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지역에서 일정 정도 시민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한 시민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장기과제로 삼고 남북 간 시민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제의 확산과 함께 주민의 의식도 개방적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시민문화와 의식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 만큼 후자를 위해서는 의식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다. 성급한 동화정책보다는 건강한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유도

- 독일의 경우 최근 들어서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동화정책보다는 동독지역 특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지역정체성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연방주의 정신에 맞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독일 국민정체성 형성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북한지역 주민의 동화 혹은 동질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북한 지역의 건강한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전체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문헌

고명덕.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2015 겨울).  
고상두.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국제문제연구』, 제15권 4호 (2015 겨울).  
김면희.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 후발주자 분단 한반도의 선택”. 『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1호 (2019 여름).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9.

“30 Jahre nach der Friedlichen Revolution: 12 Handlungsfelder zur Stärkung der ostdeutschen Länder und des Zusammenwachsens zwischen Ost und West”. Berlin: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2019.

Ilko-Sascha Kowalczyk. “Das Ende der DDR 1989/90. Von der Revolution über den Mauerfall zur Ein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9, Jahrgang, 35-37 (201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Der Spiegel*.

## Abstract

---

### 2019, Changes and Prospects for 30 Years after Berlin Wall fell

This year Germany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of Berlin Wall fell, but it is dominated by a cold climate rather than a enthusiasm for unification. In spite of certain achievements in economic leveling, there are widespread debates in Germany on emotional differences, mutual prejudices and social psychological discriminations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repor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problems of economic structure of the East German region, the partiality of elite recruitment, the revival of nostalgia for East Germany (“Ostalgie”), and the formation of a political landscape unique to the region. After describing the German government's response to this, it argues that the inferiority of the inhabitants of East Germany will continue for a considerable time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Keywords: German 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extremism, separation of political topography

---

# INSS

## 전략보고

January 2020. No. 55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B/D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http://www.inss.re.kr)